

감세정책과 물가안정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glcho@keri.org) · 황상현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shwang@keri.org)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낮은 소비수준을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이 된다.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공급 및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총수요 증가이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총공급 감소에 기인한다. 현재 논란 중인 감세정책 철회가 실행될 경우 총공급이 제약될 수 있어서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감세 철회는 가계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노동 및 자본공급을 제약하고 결국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인세율 인하의 국제적 경쟁 하에서 추가 감세정책 철회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를 증가시키며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는 등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을 이전시켜 국내 생산 제약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 감세정책 유지로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물가안정을 가져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거론되는 초과이익공유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생산 제약을 초래하는 규제는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시키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1.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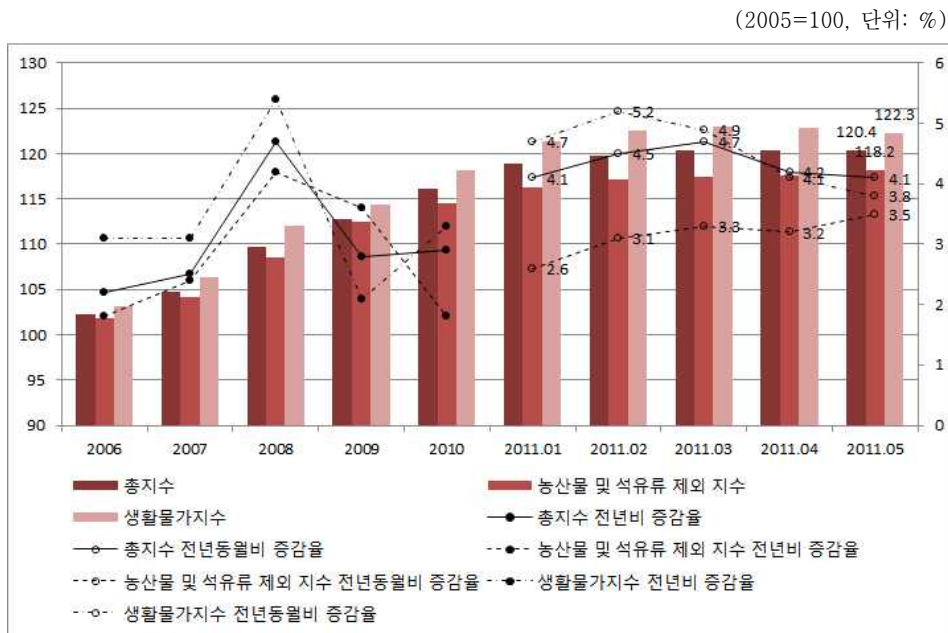
- 최근 두 가지 사회적 이슈, '물가상승'과 '감세정책 철회 논란'
 -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낮은 소비수준을 초래하므로 물가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이 됨.
 - 야권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 등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減稅)정책을 철회하자고 주장
- 본고에서는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현재 논란 중인 감세정책 철회의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

□ 최근 물가상승세 추이

- 소비자물가지수는 2011년 1월 이후 5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4%대 증가율로 급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4.1%(2011년 1월) → 4.5%(2월) → 4.7%(3월) → 4.2%(4월) → 4.1%(5월)
-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도시가스 포함)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2011년 2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3%대로 급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2.6%(2011년 1월) → 3.1%(2월) → 3.3%(3월) → 3.2%(4월) → 3.5%(5월)
- 소득 증감에 관계없이 소비지출이 필요한 기본생활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도 높은 수준에서 급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4.7%(2011년 1월) → 5.2%(2월) → 4.9%(3월) → 4.1%(4월) → 3.8%(5월)

<그림 1>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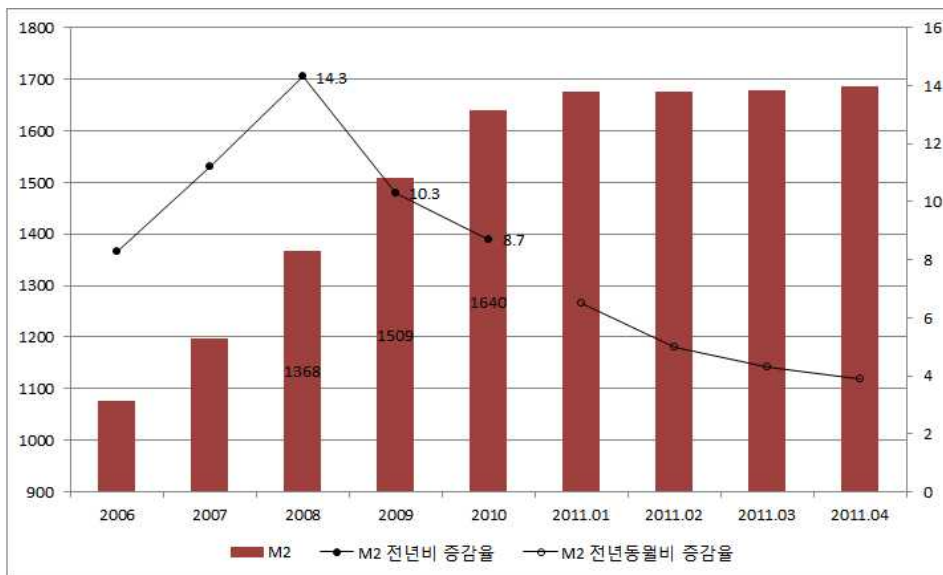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은 경기확장적 정책에 따른 총수요 증가와 생산비 충격에 의한 총공급 감소 때문임.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공급 및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총수요 증가로 물가상승
 - M2(총통화)는 2008년에 14.3%, 2009년에 10.3%, 2010년에 8.7%의 증가율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함.
 - <그림 4>에서 총수요가 $AD_0 \rightarrow AD_1$ 으로 증가하여 물가는 $P_0 \rightarrow P_1$ 으로 상승

<그림 2> M₂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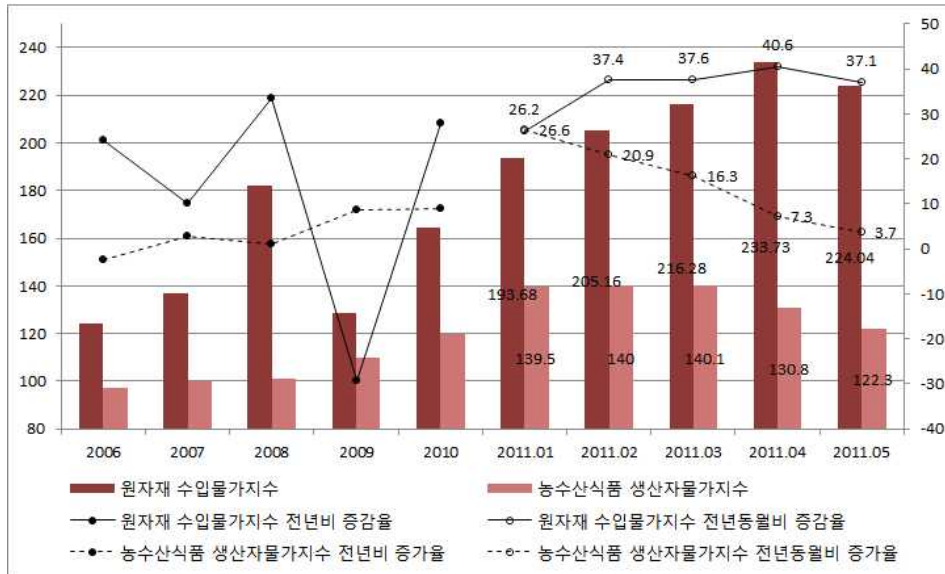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또한 최근 물가상승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총공급 감소에 기인
 - 원자재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6.2%(2011년 1월) → 37.4%(2월) → 37.6%(3월) → 40.6%(4월) → 37.1%(5월)
 - 농수산물식품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6.6%(2011년 1월) → 20.9%(2월) → 16.3%(3월) → 7.3%(4월) → 3.7%(5월)
 - <그림 4>에서 총공급이 $AS_0 \rightarrow AS_1$ 으로 감소하여 물가는 $P_1 \rightarrow P_2$ 로 더욱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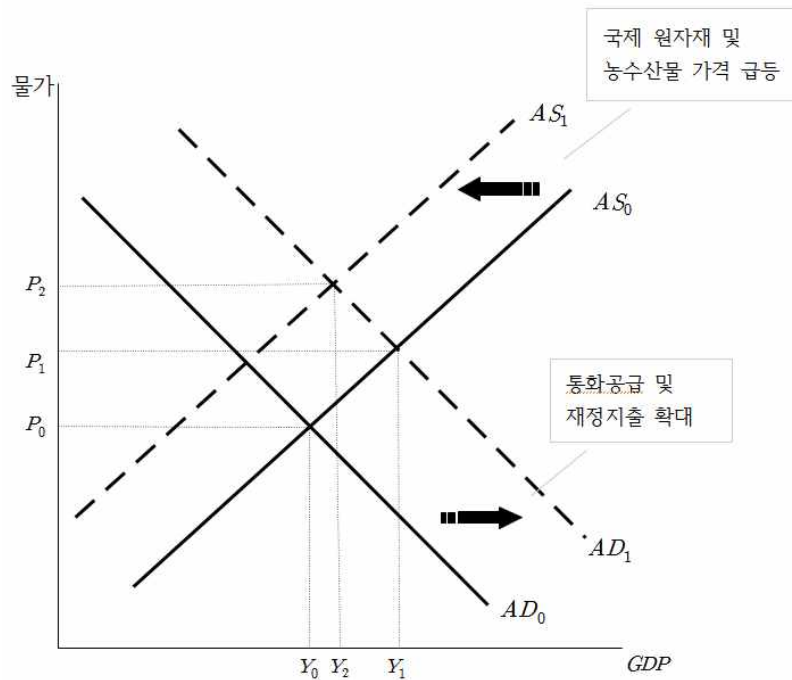
<그림 3> 원자재 수입물가지수 및 농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

(2005=100,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총수요 증가와 총공급 감소로 인한 물가상승



3. 감세정책 철회와 물가상승 압력 확대

□ 복지 포퓰리즘에 기인한 감세정책 철회 논란

- 당초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소득, 2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의 과표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이 각각 2010년까지 2%p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행이 올해까지 2년간 유보
 - 2007. 12. 31. 세법 개정: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1,000만~8,000만 원 → 1,200만~8,800만 원)
 - 2008. 12. 26. 세법 개정: 종합소득세 세율 조정(8·17·26·35% → 2009년 6·16·25·35% → 2010년 6·15·24·33%), 법인세 과표구간 상향조정(1억 원 → 2009년 2억 원) 및 세율 조정(13·25% → 2009년 11·22% → 2010년 10·20%)
 - 2009. 12. 31. 세법 개정: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2010~2011년 35% → 2012년 33%),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2010~2011년 22% → 2012년 20%)
- 내년부터는 다시 시행되어야 할 감세정책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또 다시 철회 논란에 있음.
 -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더하여 이른바 ‘3+1 무상복지 시리즈’라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
 -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패배 이후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이로부터 생긴 재원을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 복지예산에 활용할 것을 주장

□ 감세정책 철회는 생산을 제약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

- 근본적으로 감세정책 철회는 가계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욕을 떨어뜨려 생산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이 낮은 수준에서 공급되게 하고 이는 결국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수준을 떨어뜨림.
- 법인세율 인하의 국제적 경쟁 하에서 감세정책 철회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며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는 등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을 이전시켜 국내 생산 제약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OECD 국가들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1985년에 평균 48.5%에 달했으나 1990년 41.3%, 1995년 36.7%, 2000년 32.6%, 2005년 28.2% 수준으로 낮아졌고 2010년에는 25.6% 수준으로 인하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010년 기준 24.2%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동유럽 국가 등 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나 홍콩(16.5%), 대만(17%), 싱가포르(17%)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

<표 1> OECD 국가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

(단위: %)

국 가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호주	46.0	39.0	36.0	34.0	30.0	30.0
체코	-	-	41.0	31.0	26.0	19.0
헝가리	-	40.0	18.0	18.0	16.0	19.0
아일랜드	50.0	43.0	38.0	24.0	12.5	12.5
일본	-	50.0	50.0	40.9	39.5	39.5
한국	-	-	-	30.8	27.5	24.2
멕시코	-	-	-	35.0	30.0	30.0
폴란드	-	-	40.0	30.0	19.0	19.0
슬로바키아	-	-	40.0	29.0	19.0	19.0
터키	-	-	-	33.0	30.0	20.0
영국	40.0	34.0	33.0	30.0	30.0	28.0
미국	49.8	38.7	39.6	39.3	39.3	39.2
OECD 평균	48.5	41.3	36.7	32.6	28.2	25.6

주: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

자료: OECD Tax Database(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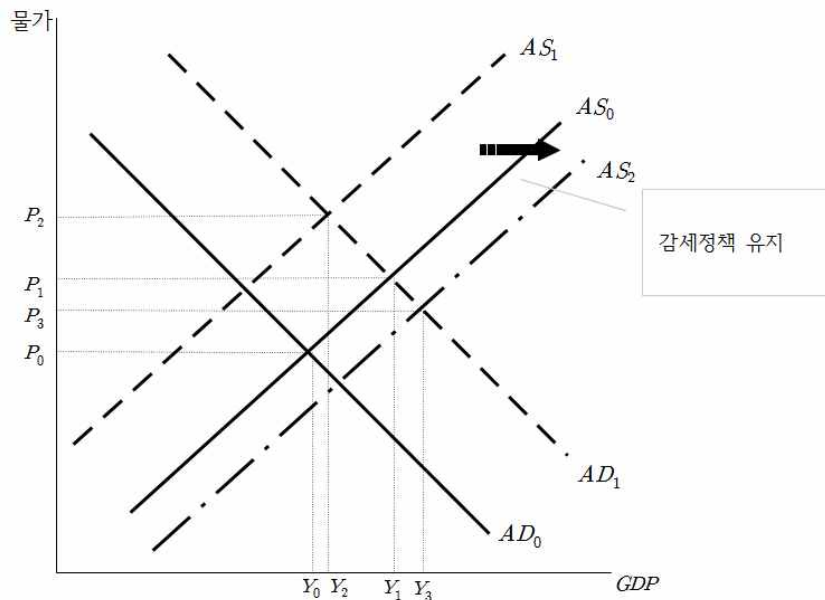
-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함께 감세정책 철회에 의한 높은 소득세율은 생산요소로서 노동을 더욱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며 생산 제약을 심화시킬 수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 현 시점에서 감세정책 유지로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물가안정을 가져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됨.
 - 감세정책은 단순히 구매력을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옮기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는 없음.
 - 감세가 정부지출 축소에 의해 동반된다면 감세로 인한 가치분소득의 어떤 증가는 정부지급을 받는 사람들의 그에 상응하는 소득 감소로 상쇄될 것임.
 - 즉, 균형재정을 만족할 경우에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서 지출하는 것이 민간이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바뀔 뿐임.
 - 또한 적자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채권이 민간부문에 판매되어 화폐는 정부채권의 구매자들에서 정부로 이전됨.
 - 감세정책은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가격 하락 및 공급 증대를 가져와 생산물인 재화 및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총공급이 증가되고 물가는 안정됨.

-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낮은 한계세율은 여가, 소비 및 조세피난처를 상대적으로 더욱 비싸게 만들어 일을 장려하고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킴.
- <그림 5>에서 총공급이 $AS_1 \rightarrow AS_2$ 로 증가하여 물가는 $P_2 \rightarrow P_3$ 로 하락하여 안정됨.

<그림 5> 총공급 증가로 인한 물가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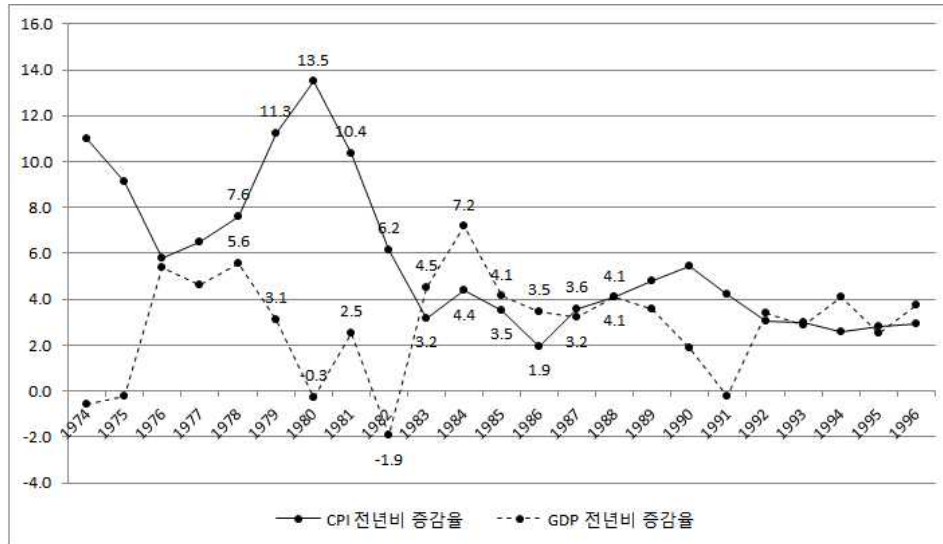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거론되는 초과이익공유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생산 제약을 초래하는 규제는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시키므로 철회되어야 함.
- 유동성 확대 원인으로 작용하는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며 감세정책 유지로 “낮은 세율 → 높은 노동 및 자본공급 수준 → 경제성장 → 넓은 세원 확보”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역사적 경험: 미국 레이건 정부(1981~1989)의 정책 및 결과
 -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로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정책적 배경이 됨.
 -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레이건 정부의 정책은 공급 측면을 강조하여 정부지출 축소, 노동 및 자본소득에 대한 한계세율 감소, 정부 규제 감소, 긴축통화정책 등으로 요약됨.
 - 레이건 정부 정책의 결과로 경기부양과 함께 물가가 안정되었음.

-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레이건 정부의 집권 전년도(1980년)에 13.5%까지 기록하였으나 레이건 정부의 2년차(1982년)에는 6.2%로 절반 정도 떨어졌으며, 마지막 해(1988년)에는 4.1%로 낮아졌음.

<그림 6> U.S. CPI 및 GDP 전년비 증감률

(단위: %)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